

동해 바다를 지키고 있는 울릉도와 독도 주민들에게 간절한 바람이 있다. 바로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이다. 섬을 떠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울릉도와 독도를 지속가능한 섬으로 만들기 위해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지속가능한 섬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

울릉도와 독도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국내외 해상 교통의 요충지로 해양영토를 넓히고, 국경 해역을 감 시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유지한다. 또한 울릉도 주변 해양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해 양생물의 산란장이자 서식장으로서 동해 해양 생태계 의 '오아시스'와 같다. 그 덕분에 한반도 기후 변화 연 구의 최적지로 꼽힌다. 울릉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해양영토를 보유한 지자체다. 독도가 사라지면 주변 해양영토 6만 574km²가 사라지게 된다. 이는 대 한민국 해양영토 10만 295㎢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처럼 우수한 울릉도와 독도를 지속가능한 섬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울릉도와 독도에 살아가 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이에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이 해 답으로 제시됐다.



##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이미 오래전부터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은 울릉도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이었다. 1882년 울릉도 개척 이래 울릉도 주민들은 삶은 녹록하지 않았다. 울릉도의 생업 기반인 어업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1990년 474 척이던 울릉도의 어선 수는 2000년 388척, 2022년 138척으로 줄어들었다. 게다가 물가는 비싸고, 의료·문화 혜택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자연재해도 자주 발생해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은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이 같은 열악한 정주 여건 때문에 울릉도 인구는 점점 줄고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변하고 있다. 2023년 11월 현재 8,996명으로 전국 226개 시·군·구 유일의 1만 명 미만의 초미니 지자체가 됐다. 인구 소멸 주요인은 주택 보급률 저조(전국 최하위), 고물가, 교통, 의료, 복지, 교육, 문화, 통신 등으로, '울릉군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대 목이다.



## 기존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의 차이점

현재 독도 지원에 관한 법률은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등 울릉도·독도 관련 법률에 의해 독도 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 법률의 내용은 주로 독도와 주변 해역의 이용이나 관 리,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독도 에 대한 개발, 보전, 활용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법령 의 존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존 법령만으로는 도 서지역인 울릉도와 독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안전한 주거환경 확충과 소득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했다.



제정을 위해 국회에 합동방문했다.

이에 2023년 3월 30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 안에는 종합발전계획 의 수립 및 변경,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사업비, 보조금의 지원, 주민 안전시설 우선지원, 노후주택 개 량지원, 정주 생활지원금 지원, 교육지원, 기반 시설 설치, 불법조업 방지시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국회공청회가 열렸다.

## 제정을 위한 행보 남한권 울릉군수는 김병욱 국회의원과 함께 2023년

울릉군,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

4월 13일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장 제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 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그리고 정우 택 국회부의장을 만나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 제 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더불어 강한 의지를 표명 하는 등 행보를 펼쳤다. 2023년 5월 1일, 국민의힘 김 기현 당 대표실을 방문한 것도 그 맥을 같이 한다. 2023년 11월 7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울릉도 독 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릉도 독도 지 원 특별법」과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외곽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절한 뜻을 함께하며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먼섬 지원특별법」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 법안은 울릉도 등 먼 섬에 사는 국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 로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과 국민의힘 김용판 간사 및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간사와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행정안전부와 울릉·신안·옹진군이 후원해 제정 가능성을 높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울 릉군과 울릉군의회, 남진복 경북도의원, 농·수협, 이장 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최수일·김병수 전 울릉군수가